

#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12.

발 의 자 : 유용원 · 김소희 · 김미애  
안철수 · 최형두 · 이현승  
조승환 · 정희용 · 임종득  
이달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 ·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. 또한,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,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,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,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,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.

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,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,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,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, 제17조, 제25조, 제26조, 제27조).



##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,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”를 “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국방업무의”를 “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”으로, “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·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”을 “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”을 “군 책임운영기관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”를 “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목표”를 “제1항의 적정”으로, “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”을 “정할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2020년까지 기술집약형”을 “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장군 육성의”로, “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

준으로”를 “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”를 “상비병력규모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) 국방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상비군 규모의 적정 수준을 정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최초의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여군 인력의 활용확대) ①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<u>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,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.</u>	제16조(여군 인력의 활용확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② (생 략) 제17조(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) ① 국방부장관은 <u>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·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거나,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u>	② (현행과 같음) 제17조(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) ① ----- <u>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</u> ----- ----- <u>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</u>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<u>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지정·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</u>	② ----- <u>군 책임운영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25조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 ①  
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.

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,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,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6조(적정 간부비율의 유지) ①  
국군의 장교·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7조(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) ① (생략)

제25조(상비병력 규모의 조정) ①  
-----  
-----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-----.

② 제1항의 적정-----정할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적정 간부비율의 유지) ①  
-----  
-----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-----  
-----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) ① (현행과 같음)

<p>② 예비전력규모는 <u>2020년까지</u>  <u>상비병력규모와</u> 연동하여 개편          • 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② -----<u>상비병력규모</u>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